

# 尹 “의료계 불법행위 엄정 대처”... 의대생·전공의 복귀 촉구

###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제 “집단 휴진·진료 거부 매우 유감 의대생·전공의 복귀해 의견 내면 목소리 경청해서 길 찾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로 바로 세우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의료 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

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환자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신 의료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사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름철 장마·폭염을 앞두고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며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사전 점검하고, 반지하주택 등 취약 시설에 예방조치를 하며, 풍수해 발생 시 위험지역 사전 통제와 선제적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이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폭염은 어르신,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이라며 “취약 시설과 취약 가구에 대한 냉방비·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건설·택배 노동자 등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올여름, 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야, 단독 상임위 강행...여, 권한쟁의 심판 청구

### 21대 국회 때는 ‘각하’ 결정

국민의힘은 18일 11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면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의정단 선출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당 소속 의원들의 국민대표권, 의정단 및 상임위원장 선인 절차 참여권, 국회 안전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

에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현재의 현행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논란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우원식, 이학영 의원이 각각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상임위원장 배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0일 본회의가 열렸고 이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우 의장 측은 지난 15일 국민의힘 의원 79명을 11개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명단을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4년 전인 2020년 21대 국회 초반에

도 당시 민주당 출신이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 등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에 복귀해 권한 침해 상태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4년 전에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단독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번에는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청구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국민의힘은 “입기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의원들이 함께 청구인이 돼, 의정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주권자가 만든 헌법의 기준으로 판단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민주, 방탄 위해 검찰·법원 겁박” 파상공세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고 검찰, 사법부, 언론을 겁박하고 있다며 파상공세를 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삼권분립, 언론, 의회, 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모두 파괴하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1인 지배정당이 됐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를 이 대표 구하기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거대 의석을 칼로 삼아 법치주의의 목을 겨누고 있다. 국회는 이 대표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북 송금 특검법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상설특검법 개정을 통해 교섭단체 간 협의 없이 특검을 임명하려 한다”며 “수사기

관 무고죄도 신실해 검사를 고발할 수 있게 하고, 더는 수사기관이 소환조사를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꾸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첫 회의에서 “정경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기어이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 방해를 위한 흉위병 작전을 개시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를 이재명 한 사람의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여의도 대통령’인 상황에서 법치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도가 이렇게 심한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지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나경원 “국힘 당권 도전 적극 생각...원외 대표는 한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8일 차기 당권 도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당원·동료 의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적극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생각해 보겠다”며 “월요일(24일)이 후보 등록일이니까 그 전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표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던 나 의원은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출마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나 의원은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마지막으로 하겠다”면서 “전당대회에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건강하게 토론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이대환’ (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란 설이 돈다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며 “꼭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만 있지는 않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주전쟁터가 의회가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 순간에 본회의장에 가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본회의장에 같이 있을 수 있는 대표가 누구냐의 문제가 있다”며 ‘원외 대표 한계론’도 재차 부각했다.

/연합뉴스